

『코리아an 미러클 4: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

1997년 외환위기의 태풍

위기의 새벽

신년을 뒤흔든 한보사태

정축년 첫 새벽이 밝았다.

1997년 1월 1일의 새해 분위기는 여느 해와 비슷해 거리엔 설빔 차림으로 세배를 다니는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다. 신년 이틀 연휴를 마치고 1월 3일 아침 출근한 직장인들은 시무식에서 “올해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그해 말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무더기로 날아가고 대한민국이 파산위기를 맞을 것이라 예측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1997년 말에 30대 대기업그룹 가운데 8개를 비롯해 1만7천여 개 회사가 연쇄도산하고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났으며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건국 이래 사상 최악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는다.

일반인들과는 달리 불안 속에서 정축년 새벽을 맞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미 1996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 부도위기에 몰린 대기업 관계자들이었다. 1996년 하반기에 서주산업, 유원건설, 우방 등 규모가 큰 몇몇 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쓰러졌고, 기아차, 쌍용, 삼미, 진로, 한보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자금난에 몰려 있었다. 특히 한보그룹은 1996년 12월부터 이미 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997년 1월 4일 토요일. 당시엔 은행이 토요일에도 근무했다. 이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들이닥쳤다. 그는 만나지 않겠다는 신광식 행장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11층 행장실로 무작정 찾아가 추가대출을 요구했다. “추가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한보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다 같이 죽는다”는 정 회장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신 행장은 “죽으면 죽었지 더는 못해 준다”고 맞섰다.

이미 은행권에서 한보철강은 ‘은행돈 잡아먹는 불가사리’로 소문이 나 있었다. 더구나 한 달 전 은행들 몇몇이 공동 대출했던 긴급협조융자 4천억 원이 제철소 짓는 데가 아니라 종금사(종합금융회사)들 빚 갚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행권의 분노가 컸다. 한때 끈끈한 친분을 과시했던 정 회장과 신 행장 사이였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 속에 고성이가 오갔다.

결국 정 회장은 그날 주거래 제일은행으로부터의 추가대출에 실패한다. 한보가 은행권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미 두어 달이 넘은 상태였다. 은행장들은 정 회장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몸을 사렸고, 한보의 자금담당 임직원들은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 1996년 후반기부터 매일 제2금융권 창구에서 살다시피 했다. 종금사, 금고, 할부금융 등에서 급전을 구해 버텼다.

그나마도 돈줄이 막히자 마지막에는 수상한 고리사채(高利私債)까지 빌려 간신히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러나 사채를 구하는 것도 한계에 달했다. 정축년 정초부터 정 회장이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들이닥친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막막함에서 나온 마지막 노력이었다.

1997년 1월 20일 한보는 결국 결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날 자정을 넘기고 만다. 특정 기업의 어음이 결제일에 은행에 돌아왔을 때 은행에 잔고가 없는 경우 당일 영업시간 이후 어음교환소에 돌리게 된다. 그날 밤에라도 돈이 들어오면 부도를 막지만 다음날 아침까지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완전히 부도처리된다. 한보가 돈을 마련하지 못해 자정을 넘겼으니 21일 아침에는 부도를 내야 했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큰 기업이라 거래은행들이 함부로 부도처리를 하지 못한 채 은행감독원에 다급하게 처리방안을 물어왔고, 은행감독원은 한보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한보사태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매일 동향

과악을 하고 있었다. 은행감독원으로부터 한보사태를 전해 들은 청와대 조세금융 비서관실은 22일 아침 이석채 경제수석에게 다음과 같이 긴급 보고했다.

“이미 이틀이나 한보의 부도어음이 쌓였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결국 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석채 수석은 곧바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부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한보를 부도처리하기로 결정했다.

1월 23일 오후 3시 30분쯤 열린 채권단 회의에서 한보 측은 “모든 주식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기는 하겠지만 이걸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상황과악을 전혀 못하는 한보 측의 무리한 주장에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채권은행단은 이날 오후 4시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토론 없이 “한보를 부도처리한다”는 것으로 공식 결론을 냈다.

한보사태로 금융시장 휘청

정 회장은 1월 31일 구속됐다. 그의 구속은 사태의 끝이 아니라 ‘한보 게이트’라는 이름의 대형 금융스캔들의 시작이었다. 한보사태 수사과정에서 각종 금융비리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은행 실무자들은 “외압에 따라 별다른 타당성 검토도 없이 대출해 주라고 위선에서 말하면 대출해 줬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은행장 2명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다음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정태수 회장의 로비내용이다.

모 호텔 1950호실은 정태수 회장이 정·관계는 물론 금융권에 대한 로비장소로 사용하던 방이었다. 그는 1995년 초부터 60여 회에 걸쳐 이 방으로 각계인사들을 은밀히 초청하여 저녁을 접대하면서 로비를 벌이고 돈을 건넸다. 당시 ‘은행 문턱이 높다 하되 한보 아래 뒹이로다’라는 말이 나돌았던 것도 정 회장의 이처럼 왕성한 로비력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한보사태는 단순한 금융비리나 정치권 스캔들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 이후 한국 경제에 닥친 본격적인 태풍의 전조(前兆)였고 긴 악몽의 서막이었다.

위기의 전조(前兆) 증세

22개 한보 계열사들이 모조리 연쇄부도가 나자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을 비롯하여 한보와 거래하던 은행, 종금사 등 61개나 되는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부실의 늪에 빠졌다. 금융권의 한보 부실채권 규모는 6조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보사태로 부실이 심해진 금융기관들, 특히 종금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신(與信)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다른 기업들까지 부도위기에 몰렸다. “한보철강 뿐만 아니라 삼미특수강과 기아특수강의 부도가 임박했고, 쌍용자동차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금융권에 흘러 다녔다.

거리에서는 노조의 가두투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1996년 12월 26일 정리해고 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된 투쟁이었다. 이후 1997년 1월말에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전국적인 총파업이 계속되면서 적잖은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2월 19일,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노동개혁 입법을 둘러싼 노사분규와 한보그룹 부도 등을 이유로 한국외환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등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규모가 큰 3개 은행의 장기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특히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이석채 경제수석의 발언파문 이후 한보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해외자금 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거시경제 착시현상

그러나 한국의 장기(長期) 국가신용등급은 A1이 그대로 유지됐다. 4월 18일 또 다른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S&P(Standard & Poor's)도 제일은행의 신용등급은

하향조정하면서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로 계속 유지했다. 한국은 정부가 발행한 외화국채가 없었고 각종 거시경제 지표, 이른바 ‘펀더멘털’(fundamental)이 나쁘지 않았던 것 역시 높은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된 이유였다.

성장률, 통화, 금리, 물가, 재정수지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상 별다른 이상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연평균 8%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이 3년 이상 계속되었고 한때 9% 넘게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996년에는 수입물가 하락에 힘입어 5% 미만으로 안정됐다. 통화와 재정건전성도 착실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총통화 증가율은 안정적이었고 재정도 소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실질실효환율이 오르고 있었고 이 시기의 원화는 측정방식에 따라 2.4~9.2% 정도 저평가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적 악화

유일하게 표면적으로 감지된 거시지표상의 불안요인은 대외부문이었다. 자본재와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늘면서 지속적인 적자를 냈던 경상수지는 1996년에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초에 60억~80억 달러로 예측됐던 1996년 연간 경상수지 적자가 연말 집계결과 237억 달러나 됐다. 예상치의 4배였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고 봤다. 1990년대 들어 한창 수출에 기세를 올리던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가전,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들의 국제가격이 크게 떨어져 1996년 말 한국의 수출단가지수는 86.6%로 떨어졌다. 반면, 수입단가는 거의 변화가 없어 교역조건은 1년 전보다 10% 이상 크게 악화되었다.

일본 엔화 가치의 장기적 약세를 용인한 선진국들의 ‘역(逆) 플라자 합의’ 때문에 한국 등 주요 아시아 신흥국 통화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되었던 것이 주원인이었다. 당시 엔화 가치는 1996년을 전후한 2년여 동안 30% 이상 떨어진 반면

한국 원화가치는 15% 떨어지는 데 그쳤다. 엔화의 장기적 약세와 원화의 상대적 강세는 수출경쟁력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진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졌던 또 다른 이유는 단일관세율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인다는 이론에 따라 한국 정부가 1993년에 도입한 8% 단일관세율이 성급했다는 주장도 있다.

단기외채 급증, ‘넉넉한 달러’의 덫

그런데도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은 갑자기 넉넉해진 국내 달러 사정 때문이었다. 1992년 제한적이긴 했지만 외국인 주식투자가 허용되었고 1993년 이후에는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해외 단기차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자본수지 부문에서 달러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자본수지는 장기직접투자가 아닌 주식투자 및 외화차입 등 단기자금의 형태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6년 말 외채총액은 IMF 기준 1,644억 달러로 이 가운데 단기외채의 비중이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증가속도도 빨라서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대외지불부담은 4년 동안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단기외채 도입이 급증한 원인은 정부가 단기외화대출의 용도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단기외화차입을 대폭 자유화했기 때문이다. 외화대출 시 중장기외화자금의 의무 조달비율 규제도 60%에서 40%로 크게 낮춰 줬다.

별다른 외화건전성 규제나 금융감독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을 통한 단기자금 유입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엔 캐리 자금, 아시아 각국에 버블 형성

1990년대 들어 일본, 유럽, 미국 등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들에 대해 아낌없이 대출을 계속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실질금리는

극히 낮은 반면 아시아 신흥국들은 시장 실세금리가 10%를 훨씬 넘는 데다 단기인 만큼 문제가 생겨도 회수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시아 국가의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국가신용이나 다름없어 대출에 따른 위험도 거의 없다고 봤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대출된 자금은 단일 국가로는 일본의 엔 캐리(Yen Carry) 자금이 가장 많았다. 엔화 강세 시절 자산버블이 생기고 실질금리가 거의 제로에 도달하면서 일본인들이 해외투자과 대출을 크게 늘렸던 것이다. 엔 캐리 자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시아 각국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버블을 확산시켰다.

일본의 엔 캐리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 온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었다. 1994~1996년 중 24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무더기 전환되면서 해외 금융업무 규제가 풀리자 이들은 엔 캐리 자금 등 단기 해외자금을 들여와 국내 대기업의 중장기 투자자금으로 빌려주었다. 정부는 높아진 원화가치 상승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처럼 직접적으로 자본유입을 막는 대신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허용해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때문에 종금사 등은 해외에서 쉽게 조달한 달러 단기자금을 아시아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중장기 대출을 해주면서 금리차익과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같은 기간에 국내은행들도 28개 해외지점을 신규 개설하면서 외화차입을 크게 늘렸다.

국제금융감독 기능이 미비한 상태에서 단기외채 유입 급증에 따른 금융부문 위험관리 취약성이 결정적으로 뇌관을 건드려 ‘외환 시한폭탄’의 초침이 재각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잉태된 세 가지 복합위험

1990년대 중반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기업이나 금융기관 해외법인들에 한국 본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시원시원하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 때문에 1996년 말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데도 자본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다.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쉬워지자 실질금리는 7% 대로 하락했다. 대폭 늘어난 해외유동성과 낮은 금리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에도 버블이 끼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적 신용이 있는 대기업들은 손쉽게 단기 해외자금을 빌려 장기 시설투자에 쏟아 부었다. 1996년 말 한국 30대 대기업그룹 부채비율은 평균 382%나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세 가지의 복합위험을 잉태시켰다. 외국에서 단기자금을 빌려다 중장기 시설자금으로 쓰는 바람에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를 일으켰고, 해외통화를 빌려다 국내통화 혹은 제3국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가 발생했으며, 저금리로 인한 과잉부채 투자버블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가 민간경제가 글로벌 체제에 편입되는 엄청난 변화과정 및 속도를 거의 눈치채지 못했고, 외환위기 진단에 전통적 거시경제 지표만을 비교기준으로 삼은 통계 착시(錯視) 현상 때문이었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역시 국가경제의 위기진단 지표로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공공부문 부채 등만을 거론할 때였다.

단기외채를 빌려 쓰면서 한국의 대외지불부담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40%를 넘었던 1980년 중반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수준이었기에 이 정도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한국 내의 은행과 기업들이 직접 해외에서 돈을 빌려 들여왔으면 단기외채 급증의 심각성을 눈치챘을 텐데 은행과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들이 본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빌린 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한 형태가 많았기에 통계상 착시현상이 벌어졌다.

기업들의 연쇄부도와 부도유예협약

한편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좀더 근본적인 위기가 금융권과 재벌기업들 속에 잉태되고 있었다.

나중에 IMF에 의해 지적된 당시 한국 경제의 두 가지 구조적 문제점은 첫째, 은행들의 여신관행이 놀랄 만큼 후진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은행들은 독자적이고 상업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의해 여신을 결정하는 관행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다. 특정 대기업들에 대한 과다여신에 대한 위험관리나 대손충당금, 적정자기자본, 유동성 관리 등 독자적 내부관리가 별로 없었고 감독기관의 규제도 느슨하기 짝이 없었다.

이 때문에 재벌들은 대출금융기관, 주주, 기업내부의 경영진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지 않은 채 거액여신을 빌려다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에 과잉투자를 했다. 재벌들의 부채비율은 갈수록 높아졌고, 은행 재무제표에는 부실채권들이 자산의 형태로 변형되어 쌓여갔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 초 한보그룹 부도가 발생하자 금융권에 큰 충격파가 미쳤다. 61개나 되는 채권금융기관들이 거액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면서 자금시장이 급속도로 경색되었고 그 여파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미쳤다. 시장에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설마 정부가 한보 같은 대기업을 부도낼까?”

이렇게 막연히 낙관하다가 한보부도가 현실화되자 불안해진 금융기관들은 부실 가능성이 큰 기업들부터 서둘러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한보부도를 겪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부도 공포증’에 시달려 업무보고 때마다 부도를 내지 말라고 경제각료들에게 당부했지만 정부가 어떻게 손을 써볼 틈도 없이 3월 20일 삼미그룹이 부도를 낸 데 이어, 다음달 4월에는 진로그룹이 쓰러졌다. 쌍용차 역시 위기에 몰려 지급보증을 선 쌍용그룹 계열사 전체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5월에는 대농그룹이, 그리고 6월에는 한신공영이 부도처리되었다.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함께 부도처리되었다.

한보철강 부도 이후 매달 한두 개 대기업들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순환보증으로 엮힌 전체 그룹 계열사들이 한꺼번에 쓰러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와 거래업체들까지 연쇄부도를 내는 ‘부도 도미노’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급하게 생겨난 것이 1997년 4월의 ‘부도유예협약’이다.

대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당장 부도처리하지 말고,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가지고 채권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해 보라. 살릴 방법이 있는지, 살릴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하청업체 문제나 근로자 문제 등을 논의하고 사태파악을 한 이후에 부도처리를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기업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 간 협정’이라는 금융단 협약을 근거로 했다. 정부는 금융권 자율로 부도유예협약을 운영하도록 했다. 법도 없고 근거도 없어서 일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으로 간 것이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신규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도유예협약이 만들어진 후 첫 수혜자는 진로그룹이었다. 5월에는 대농그룹, 7월에는 기아차그룹이 부도유예협약 대상이 된다.

또한 대기업 연쇄부도로 은행이 떠안게 된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정부는 4월 23일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를 만들고 기구 내에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개입

1997년 1/4분기에 대기업 연쇄부도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외채만기 차환율이 낮아지고 외화유출액이 커지자 정부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외채상환 부담과 물가상승 등을 우려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3월까지 석 달간 현물시장에서 85억1천만 달러를 매도했고 사상 처음으로 선물환(先物換) 시장까지 개입하여 38억4천만 달러를 매도했다.

외환시장 개입과정에서 줄어든 외환보유고를 걱정한 정부는 1997년 4월부터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금융기관에 경제특사와 고위간부들을 파견하여 해외차입 노력을 계속한다.

당시 국제금융시장을 돌아다니며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를 맡았던 김기환 대외경제협력 특임대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1997년 초에 강경식 장관이 나한테 전화해서 “대외경제협력 대사직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그걸 좀 맡아 주면 어떻습니까?” 고 제의했다. 그때 다른 할 일이 있어서 흔쾌히 예스를 안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갈수록 악화되더라.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 일을 맡는 게 좋겠다 싶어서 특임대사직을 수락했고 정식 임명장을 받은 게 4월 무렵이었다. 그 이후에 ‘한국은 거시경제 지표의 펀더멘털이 아주 좋다, 절대로 문제없다’ 그런 이야기를 국제금융사회에 강조하고 돌아다녔다. 영국, 미국, 유럽 등의 큰 금융회사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IR 활동을 했다.

한보사태의 여파가 진정되면서 외화차입 상황이 다소 나아지자 정부는 6월말까지 석 달 동안 줄어든 외환보유고를 보충했다. 이 기간에 41.7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더 쌓았고 외화예탁금도 21억 달러를 추가로 보충했다.

1997년 6월,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형성된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에서 1개월물 원·달러 선물환율은 큰 변동 없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환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태국발 금융위기

불안한 평온이 갑자기 깨지고 아시아 경제 전체에 심상치 않은 경보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은 1997년 7월초 태국에서부터였다. 헤지펀드가 태국 바트화를 투기 목적으로 공격하자 태국은 한동안 악전고투하다가 고정환율제 포기를 선언했

다. 변동환율제하에서 바트화는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는 불확실성이 신뢰의 최대의 적이다. 시장은 태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를 믿지 않았으며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정보도 없어서 투자자들은 이미 최악을 염려하게 되었다. 8월에 IMF와 172억 달러 구제금융에 합의하고 태국이 고갈된 외환보유고를 밝히자 바트화 폭락과 자본이탈이 재개되었다.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곧바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당시 아시아 외환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작고 정보가 불투명한 시장이었다. 소수의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태국발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포트폴리오 관리차원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자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들을 따라하는 군집행동이 나타났다. 아시아 역내 국가들끼리 무역과 자본시장이 밀접하게 연계된 것도 외환위기의 전염이 유난히 빨랐던 이유로 작용했다.

부도유예 협약에 들어간 기아차

태국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당시 한국 정부는 국제금융시장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태국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7월 15일 기아차그룹이 부도를 내고 부도유예협약에 들어간 것이다. 기아부도는 부채에 의존한 무리한 설비확장과 과잉투자, 자동차와는 무관한 업종에 대한 확장으로 수익성 악화 등이 겹쳐 빚어낸 사태였다.

한보부도 이후 종금사들은 대출회수를 서둘렀다. 단기채무 비율이 57%나 되는 데다 종금사 대출비중이 유난히 높았던 기아차그룹의 경우 4월에서 6월 사이에 무려 5천5백억 원이 넘는 돈을 회수당했다. 한보사태에 놀란 금융권은 정부의 협조요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보사태가 외환위기 악몽의 서막이었다면, 기아차 사태는 본격적인 태풍이었다. 26개 계열사에 2만여 개 하청업체를 거느린 기아차는 전 세계 160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었다. 관련 임직원 수만도 20만 명이 넘었다.

기아차는 재계 서열 8위라는 거대기업이었던 데다, 특정 대주주가 없는 분산된 지분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 종업원지주제 등 겉보기에는 선진적 경영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봉고차 등을 생산해 국민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주던 것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져 오히려 빠른 정리의 걸림돌이 되었다.

채권은행단은 협조용자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김선홍 회장의 사표와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기아를 국민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동정여론 뒤에서 석 달 이상 버티기를 계속했다. 기아차 노조는 또 “정부와 은행이 삼성과의 물밑거래로 기아를 삼성으로 매각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대(對) 정부 투쟁에 들어갔다.

하필 그해 12월 18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다. 기아차 부도사태는 국민정서 및 정치적 이해타산, 경제적 부담이 맞물리면서 조기에 수습되지 못한 채 100일 동안이나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을 끌었다.

해외 NDF 시장에서 감지된 이상기류

태국발 금융위기와 기아차 사태 발생 이후 금융기관들의 해외 달러조달 창구가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달러를 구하지 못했다.

8월 12일, 7개 은행과 10개 중금사가 달러를 구하지 못해서 무더기 외화부도 위기에 처하자 한국은행은 이날 밤 자정 10억 달러를 풀어 부도를 막아 주었다. 8월 25일, 정부는 기아차 부도유예협약으로 인한 시장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묶은 발표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금융시장 경색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발표에는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빌린 달러를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금융기관들은 이걸 영문으로 번역하여 달러를 구하려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 무렵부터 해외 NDF 시장에서 ‘원화가치를 내려라’는 압력성 요구가 치솟고 3개월 선도환율 사이의 격차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다. 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정부보증 ‘산업은행 달러표시 채권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미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의 경제상황이 심상찮게 보인다는 반증이었다.

골든타임 100일을 놓친 기아차 사태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기아사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기아의 부도유예협약이 보름 정도 남은 9월 17일 정부와 채권단, 기아그룹은 법정관리에 대한 협의를 거듭한 끝에 대강의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채권단의 사표종용에 응하지 않은 채 두 달여를 버티던 김선홍 회장은 바로 닷새 뒤인 9월 22일 전격적으로 기아자동차 등 주력 계열사 4개사에 대해 법원에 화의(和議)를 신청했다. 뒤통수를 맞은 정부와 채권단이 법원에 화의 반대의사를 밝히고 법적 수습을 시도하는 사이에 아까운 시간이 더 흘렀다.

결국 정부는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기아를 법정관리로 처리한다고 확정 발표한다. 김선홍 회장이 사표를 낸 것은 그로부터도 1주일 더 지난 10월 29일이었다.

기아가 부도유예협약에 들어가서 법정관리 발표가 나기까지 백여 일 동안 국가신인도는 크게 추락했다. 외신들은 부도난 민간기업 하나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여론에 등 떠밀려 이리저리 표류하는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외국투자자들도 한국이 향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대기업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은행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혁할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기아차 부도 시 금융권이 지게 되는 부실채권 규모는 총 9조7천억 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은 부실규모가 워낙 큰 데다 예금인출사태까지 발생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부도난 대기업들이 워낙 많아 누적된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는 30조 원을 넘어섰다. 부실의 무게에 짓눌린 금융기관들이 자금회수를 시작했고, 악화된 신용경색 때문에 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다시 연쇄부도를 냈다. 10월과 11월에 쌍방울그룹과 해태그룹의 화의신청에 이어 한라와 청구 등도 부도 및 화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20여 개가 1년 이내에 도산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재계에 확산됐다.

종금사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은 부실대상 기업으로부터 여신회수에 바빴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은 실종됐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들로부터 국고채 환매조건부 채권(RP: Repurchase Agreement)을 매입해 1조 원의 유동성을 시중에 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불안한 한국기업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에 외국 금융기관들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외환의 유출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외환시장과 환율안정을 위해 8월 25일부터 정부는 “금융기관의 해외부채를 정부가 모두 지급보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회동의를 얻은 공식적 조치가 아니었고 법적으로 신뢰할 만한 별다른 후속조치도 없어 ‘구두개입’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뿐 외자유치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